

도내 정치권,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 일제 환영

“전북의 도전, 국가 새 출발점”

민주 도당 “아주 특별한 전북 올림픽의 꿈, 한 걸음 더 가까워져”

혁신당 도당 “시대적 과제인 지역균형발전 반영한 의미 있는 결정”

전북자치도의회 “도민들의 열정·노력이 결실 맺은 값진 성과”

도내 정치권이 지난달 28일,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전북이 선정된 것과 관련 일제히 환영을 표명했다.

▲민주 전북자치도당 “아주 특별한 전북 올림픽의 꿈, 한 걸음 더 가까워져”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 논평을 통해 “전북이 서울을 압도적인 차이로 따돌리고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아주 특별한 전북 올림픽의 꿈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전북이 올림픽 유치 도전에 나선 것을 도민과 함께 축하하며,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힘을 보탠 모든 분께 감사드리다”고 전했다.

도당은 전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향’의 고장으로, 올림픽을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방식으로 치를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36년 올림픽이 1936년 베를린올림픽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라는 점을 언급하며, 손기정

선생이 나라 잃은 설움을 안고 달렸던 그 시절과 달리, 이제는 세계 속 선진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보여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림픽 유치가 전북만의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전환된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전북의 역동적인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하나 된 전북인의 힘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혁신당 전북자치도당 “지역 균형발전 반영한 의미 있는 결정”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도 환영을 표명했다.

도당은 “이번 선정은 전북 도민의 열원과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이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지역 경제·사회·문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올림픽이 단독 개최에서 공동·분산 개최로 변화하는 국제적 흐름을 언급하며, 전북 역시 ‘지방 도시 연대’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개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의 올림픽 유치 성공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 내·외를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 관광·숙박 인프라 정비, 경기장 시설 확충 등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전북의 2036 올림픽 유치를 위한 여정이 이제 시작됐다”며 “도민들과 함께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올림픽이 전북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의회 “도민의 열정·노력이 결실 맺은 값진 성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

도 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대한체육회의 결정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열정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값진 성과”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잠재력과 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선정이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도시 연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올림픽 개최 후보지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온 국민에게 각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의회는 올림픽 최종 개최지 선정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대한체육회, 정부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전 세계인들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스포츠의 열정과 화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종 개최지로 확정되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이번 국내 후보지 선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역사적인 여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최 대행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특정 지역 편중”

민주 이춘석 의원 “형평성 어긋나… 조기대선 개입 시도”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의 특정 지역 대규모 규제 완화에 “조기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특정 지역에만 대규모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대선 개입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책 철화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총 1,271만 평(4,203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비수도권 내 15개 지역을 전략사업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산업단지·물류단지·도시개발 등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의원은 “선정된 15곳 중 11곳이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지역에 집중됐다.”며 “정작 균형발전이 필요한 전북·강원·충북 등은 선정조차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전이 이미 상당히 이뤄진 PK·TK 지역에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러한 대규모 개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의 탄핵 심판 이후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몇 개월짜리 권한대행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 대행이 지난 2월 19일 에도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발표하는 등 연이어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이지,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의 국가 정책은 국민의 심판 이후 새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민약 최 대행이 계속해서 정부 주요 정책에 개입한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노릇 한다는 말처럼, 권한대행이 월권을 행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최 대행은 즉시 조기대선 개입을 중단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김윤덕 의원 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 이스포츠활성화·국민체육진흥·대중문화예술발전법 등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 3개가 지난 2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통과되어 김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에 통과된 김 의원의 법안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역 E-스포츠 발전법’으로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이 법에 따르면 내국인 또는 법인이 지역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경우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의 E-스포츠는 아시안게임 등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효과 증폭인 동시에 청장년층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미래 산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회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열

리면서 상대적으로 지역은 소외를 받은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법이 시행되면 지역에서 더 많은 E-스포츠 대회가 열리게 되어 열기가 전북 특별자치도는 물론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또한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은 그동안 K-POP, 트로트 음악, 댄스 등의 분야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일반인들이 교통비, 식비 등 최소한의 참가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향을 사고 있었다. 이밖에 예대 일반인 출연자 뿐만 아니라 영화·드라마 등의 보조출연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김윤덕의원의 법안이 통과되어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보조출연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법안인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 진흥 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비’를 취득세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수익금의 기금 출연 관련 규정은 함께 개정되지 않아 법 조항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바로잡는 법안이다. /김육기 기자

첨단전략산업 인재 육성 위한 병역특례 확대

민주 정동영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AI강국위원회 부위원장)이 AI·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산업 분야를 병역지정업체로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및 전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AI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인재 유출과 연구개발 위축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육기 기자

어선 구명조끼 착용 조건 없이 의무화

민주 윤준병 의원,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지난달 28일 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조건 없이 의무화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어선 사고가 급증하며, 어선 인명피해 중 81.8%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에서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일부 어민들의 불편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수부가 어민들의 조업 불편을 줄일 수 있는 팽창식 구명조끼를 예비비를 활용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만호 기자 정읍=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지난달 28일 전주시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선출직 공직자와 정무직 당직자 워크숍을 연 가운데, 이원택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민생·정책 중심으로 도약할 때”

민주 도당, 선출직·정무직 당직자 워크숍… 단체장 등 참석

“당 버팀목 역할 해야”…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특별 강연도

소통 강화·지역 밀착형 정책 발굴… 조기대선 가능성 대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지난달 28일 전주시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선출직 공직자와 정무직 당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단체장, 공역·기초의원, 각급 위원회 위원장 및 대변인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원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

북도당이 민생과 정책 중심으로 도약해야 할 때”라며 “각 분야 당직자들이 실천 과제를 도출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 발전과 전국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당원과 당직자의 결속을 당부했다.

워크숍에서는 당원존 개방 활성화, 민생지원센터·정책비전센터 운영 방

안 등 다양한 제안이 논의됐다. 또한 새롭게 임명된 30명의 위원장·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특별강연에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에서 전북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이 당의 버팀목 역할을 하며, 선출직과 당직자들이 민생 개선과 미래 비전 제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참석자들은 당원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밀착형 정책을 발굴해 조기 대선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전북도당은 앞으로도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민생과 정책 중심의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민주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위 당원결의 성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위원장)은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위원회 당원결의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당원결의대회는 당원주권시대 당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당원 간 유대관계와 결속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내란 세력의 준동에 맞서

민주당원의 자세를 정비하고, 급변하는 정국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당원결의대회에는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희승 의원을 비롯해, 약 150여명의 선출직 당직자 및 당원 등이 참석했다.

박희승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및 지금까지의 탄핵 정국과 관련해 직접 강의를



말았다. 이어 주요 법안 성과를 당원 앞에 보고하고,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유치, 공공의대 추진, 대전·남원·여수 KTX 신설 등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만호 기자